

소방장비 시가 2~3배 비싸게 구입

이용호 의원, “소방청의 부적절한 장비구매제도·인력부족 때문”

소방청 내에 통일된 장비구매 기준이 없어 민등도끼, 랜턴 등 장비를 시중가에 비해 비싸게 구입하거나, 지방 소방본부별로 구입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소방청 내 장비구매절차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소방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119구조본부에 구입한 필수장비 실구매가가 시중가에 비해 2~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민등도끼의 경우 시중가가 11만 1,000원이었지만 구조본부는 23만9,000원에 구입했고, 시중가 8만 8,000원짜리 랜턴은 16만1,000원에 구

입했다. 소방청의 장비구매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유는 소방청의 부적절한 장비구매제도와 인력부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119구조본부는 장비 구매 시 직접 예산액을 결정한다. 이 때 예산액이 높게 결정되면 장비 개당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중앙119구조본부 내 예산액 결정 절차나 통일된 장비구매 기준이 없어 담당자가 알아본 가격으로 예산액을 결정하는 상황이다.

지방 소방본부 역시 소방업체 여러 곳에 가격을 문의하고, 평균가를 산정해 예산 가격을 책정하는 주먹구구식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 이다보니 일선 소방본부 장비구매 실

무자들은 장비 표준 규격이나 예산가격 기준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인력 부족도 심각한 문제다. 소방청은 정부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930종의 장비를 보유·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소방청 내 장비담당자는 13명에 불과하다. 경찰청 장비담당자가 151명, 해경 85명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방청은 ‘MAS(Multi Award Schedul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러 기관에서 유사 제품을 반복해서 구매하고, 공급업체가 2곳 이상인 제품에 대해 조달청이 업체와 직접 계약해 나라장터에 해당 제품을 등록하는 제도다. 제품이 필

요한 수요기관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을 선택, 구매할 수 있다.

이용호 의원은 “소방관들의 장비 부족 문제가 여러 번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장비를 비싸게 산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며, “장비구매절차를 명확히 하고, 중앙에서 장비표준규격과 예상가격 지침을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 MAS제도 역시 확대해 담당자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구매담당자 등 행정 실무자는 현장인력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장비 담당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실무자가 부족하지 않은지 제대로 검토하고, 필요한 인력을 제때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의붓딸 강제추행 40대 항소심서 감형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0시30분께 지역에서 의붓딸인 B양을 강간할 목적으로 흉기로 위협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은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하의를 벗겨진 상태로 겨우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양은 재판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A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1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어머니밖에 없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로서는 어머니의 강력한 뜻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어머니의 뜻에 따라 탄원서를 작성하게 됐을 뿐 피고인에 대한 용서의 마음으로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어머니의 이 같은 태도에 비추면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는 피해자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서 처벌불원으로 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자녀를 양육해야 할 위치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흉기를 사용해 위협을 가했고 추행 정도가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삼민 기자

온빛중 1~3학년 학생·학부모 안전 자전거 타기 캠페인 펼쳐

전주시는 지난 14일, 전주 온빛중 학생 및 학부모 80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에서 출발해 기지개를 자전거로 행진하며 안전한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 주요 내용은 △자전거 타기 전 점검사항 △안전하게 타는 방법 △헬멧 착용의 중요성 △교통법규 등에 대한 이론교육, 자전거를 전혀 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초배우기, 실제 자전거를 타보는 실습 및 자전거 캠페인 등으로 알차게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자전거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어릴 때부터 자전거가 차와 동일한 교통수단으로 인식하고 안전한 자전거타기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는 지난 14일, 전주 온빛중 학생 및 학부모 80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에서 출발해 기지개를 자전거로 행진하며 안전한 자전거타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안 펜션서 3명 사망... 동반자살 추정

부안의 한 펜션에서 3명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1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0시19분께 부안군 변산면의 한 펜션에서 A(55)씨 등 3명이 사망한 것을 펜션 주인이 발견했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은 방문과 참관이 테이프

로 밀봉돼 있었고 연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다.

또한 현장에서 이들이 숨지기 전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도 발견됐다.

경찰은 A씨 등 3명이 SNS를 통해 알게 돼 동반자살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삼민 기자

전주서 차량 상가로 돌진... 1명 부상

16일 오전 7시45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A(23)씨가 몰던 SUV차량이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상가 유리창과 집기 등이 파손돼고 SUV차량 운전자인 A씨가

경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운행 중에 승용차 한대가 A씨의 차량과 충돌해 그 충격으로 상가로 돌진했다.

경찰은 A씨 등 상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삼민 기자

‘오늘 전주 혁신동 행정구 결정 주민투표일’

오전 6시~오후 8시까지 11개 투표소에서 실시

전주시가 신설될 혁신동(가칭)가 배치될 행정구를 결정할 주민투표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혁신도시 주민들의 미래를 결정할 ‘혁신동의 행정구 배치에 관한 해당지역주민 투표’는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혁신도시 내 아파트와 마을별 11개소 투표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투표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한 각 마을과 아파트별 거점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했다. 투표소가 설치된 곳은 △혁신도시 민원센터(14동5만 원룸지역) △우미린 1차 커뮤니티센터 △호반3차 커뮤니티주민회의실 등 효자동 4개소와 △호반2차 커뮤니티센터(지

하) △호반5차 경로당(관리사무소 1층) △호반6차 주민공동회의실(지하) △이노벨리스 주민공동시설(103동 1층) △중흥S클래스 주민지원센터 탁구장 △우미린2차 입주자대표회의실 △옥계교회 1층(월방길주민협의체) 등 동산동 7개소다.

투표는 혁신동에 편입될 지역에 10월 10일까지 주민등록이 된 만19세 이상 주민(1998년 10월 18일 이전 출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이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번 주민투표는 공공기관 이전 등을 위해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된 혁신도시가 완산구 효자동과 덕진구 동산동으로 행정구역이 이원화되면서 주민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단일 행정동을 설치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혁신도시를 단일 행정동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혁신동이 어느 행정구로 배치해야 하는지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시는 이번 투표를 통해 행정구 배치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완산경찰서, 남성의용소방대에 단체 감사장 전달

전주시 완산경찰서는 16일 전주완산 남성의용소방대에 단체 감사장을 전달했다.

지난 9월 27일 10시께 약초를 캐러 나간 할머니가 귀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과 의용소방대가 합동 산악수색을 시작한지 2일만에 모악산 중턱 계곡 아래 가시덤불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안전하게 구조한 뒤 병원으로 후송했다.

당시 전날 비로 인해 기온이 낮았고 실종된 할머니가 간편한 옷차림으로 산행에 나서 저체온증 등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었다.

강황수 완산서장은 “실종 가족의 아픈 마음을 더 헤아려 한시라도 빨리 실종자를 찾기 위해 노력해주신데 감사드립니다”며 “실종 수색 협업체에 더욱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삼민 기자

구독문의 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cs.or.kr *전자우편 : jvcs@hanmail.net